

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성 진 서기관 (02-2100-2831) 이 용 준 사무관 (02-2100-2835)
	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김 명 규 (044-215-2750)		정 영 주 사무관 (044-215-2754)
	법무부 법무심의관 전 태 석 (02-2110-3520)		정 혜 림 사무관 (02-2110-3504)

제 목 : 「혁신금융 민관합동 TF」 Kick-off 회의 개최

1 회의 개요

- 4.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「혁신금융 민관합동 TF」 Kick-off 회의를 개최 (8:00, 은행연합회 16F)
- 동 TF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「혁신금융 비전 선포식」(3.21일)의 후속조치로서 혁신금융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
 - ※ [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대통령 발표문 中]
 - “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·관합동 TF를 신설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”
- 혁신금융의 민간 플레이어인 금융권을 대표해 은행·금융투자업권 협회장, 5대 금융지주 회장이(농협·신한·우리·하나·KB) 참여하고,
 - 이정동 교수(경제과학특보), 이인호 교수(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) 등 여러 민간 전문가도 TF 위원으로 참여

※ 「**혁신금융 민관합동 TF**」 구성

- (금융위) 금융위원장(주재), 사무처장, 금융정책국장, 자본시장정책관
- (관계부처) 기재부 제1차관, 법무부 차관
- (금감원·정책금융기관) 금융감독원장, 산업은행 회장, 기업은행장
- (금융권) 은행연합회장, 금융투자협회장, 5대 금융지주 회장
- (민간 전문가) 이정동 교수, 이인호 교수, 김중혁 교수, 이점마 교수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①민관합동 TF의 의의와 ②혁신금융의 적시성을 강조

① 혁신금융 비전은 대출·자본시장·정책금융 등에 걸쳐 법령·제도 개선은 물론, 상품개발·영업 등 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·관 협력이 필수적

②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*, 대내외 경제여건**과 시중자금의 흐름*** 등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

* 저출산·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,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생산방식 변화

** (대외) 글로벌 경기둔화, (대내) 주력산업 경쟁력 악화, 소비·투자심리 회복지연

*** 과거 부동산부문으로 집중되었던 시중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시킬 필요

- 또한 민간 금융권이 혁신금융 비전에 공감하고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*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

*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별도 추진체계 구축, 금융지주회사별로 특색있는 대출 상품이나 모험자본 공급체계 준비

- 이러한 민간부문의 공감과 변화에 힘입어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상품 출시, 보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,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

- 혁신금융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정책 금융의 “산업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”을 공고히 하겠다고 발표

- 「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」, 조선·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「맞춤형 지원 프로그램」 등은 '19년도에 자금을 신속히 집행* 하고,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

* 3년간 10조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인 「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」의 경우 '19년도에 4조원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

- “혁신적 포용국가”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부문도 민·관이 협력하여 “혁신금융”과 “포용금융”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

1. 혁신금융 TF 추진체계

- (혁신금융 민관합동 TF) 혁신금융 이행상황에 대한 총괄점검 및 조정
 - 분과TF 활동을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·조정
- (분과TF) “여신심사시스템·정책금융”, “자본시장혁신” 2개의 분과 TF를 구성하여 추진과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완 필요사항 발굴 (분기 1회, 금발심 분과회의와 연계해 운영)
 - (여신심사·정책금융) 일괄담보제도, 미래성장성 평가 인프라,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, 정책금융 지원 등 점검
 - (자본시장혁신)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, 코스닥·코넥스 활성화, 자본시장 세제 개편 등 점검

2. 은행권 혁신금융 추진계획

-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 확대, 기술금융 도입시점 대비 잔액 20배 증가*, 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** 등 소기의 성과 달성
 - * 기술금융대출 잔액:('14년) 8.9조원 → ('18년) **163.8조원**
 - ** 동산담보대출 잔액:('17년) 2,277억원 → ('18년) **4,023억원**
- ⇒ 향후 「혁신금융」에 부응하여,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, 동산담보 대출 6조원,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목표의 초과달성 추진
- 또한 일자리기업 자금공급, D.Camp를 통한 스타트업 직·간접 투자, 핀테크랩 운영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계속
 - '19~'20년 신·기보에 1,00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일자리창출 기업,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1.4조원 신규자금 공급
 - '18~'20년 은행권청년창업재단(D.camp)에 3,450억원을 신규출연 하여 스타트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

3. 금융투자업권 혁신금융 추진계획

- '18년 금투업권이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“투자”의 형태로 “중소·혁신기업*”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21.4조원**으로 추산

* 공정위가 발표한 55개 대기업집단 소속을 제외한 기업

** ① IPO/유상증자 인수(4.2조원), ② 회사채·ABS 등 인수(9.9조원),
③ 자기자본투자(5.7조원), ④ 중소형주·코스닥벤처펀드 등 펀드투자(1.6조원)

- 「혁신금융」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약 125조원*의 혁신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* ('18년 연간공급규모 21조원 * 5년) + (하단의 ①, ② 정책효과 5년간 약 20조)

- ① 업종별(예:바이오, 4차산업 기업)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등 코스닥 상장 활성화로 6조원 규모의 IPO 추가 확대 기대

* '21~'23년 3년간 연평균 2조원씩 상장규모 확대

- ② 초대형 IB의 기업금융 활성화(10조원*), 비상장기업 투자전문 회사(BDC) 도입(4조원**) 등을 통해 혁신자본 추가 공급 기대

* 초대형 IB 5개사가 발행어음 인가 후 약 20% (기업금융 의무비율 50% x 대기업집단 제외비율 40%)가 투자로 이어진다고 가정

** 미국 BDC 규모(900억달러) x 한국/미국 시가총액비율(4.6%)로 추정

4. TF위원 주요 발언

- 5대금융지주 회장단은 그룹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여신심사 시스템 개편, 모험자본 활성화 등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함께,

- 금융지주별로 특색있는 ①대출상품이나 ②모험자본 공급체계에 대해서도 소개

① 농협이 「청년 스마트팜대출」(청년농업인), KB의 「KB셀러론」(온라인쇼핑플랫폼 입점업체), 우리 「Cube-X론」(스마트공장·스마트산단 우대 등) 등

② 신한이 GIB (Global Investment Banking) 부문을 활용한 혁신투자기반 구축, 하나의 금융그룹 최초로 설립한 신기술사업금융 전업사(하나벤처스) 활용 등

※ 6p [참고] 5대금융지주회사 혁신금융 추진계획 주요내용

- **민간 전문위원들은** 혁신금융이 비전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 - **이정동 교수**(경제과학특보)는 특히 ①**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**
②**금융권의 산업혁신에 대한 평가역량 강화** 필요성을 강조
 - ①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혁신금융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적극적·선제적으로 나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
 - ② 기술·미래성장성 위주의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산업 전문인력 확대 등 평가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
 - **기재부·법무부도** 금융세제, 일괄담보 등 부처 소관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공유
 - 법무부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근거 마련, 적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*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
- * ① 동산채권·지식재산권을 한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근거 마련
 ② 기존에 법인과 상호 등기자들로 한정되어있던 적용범위를 확대
 ③ 담보물에 대한 악의적 훼손·멸실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을 포함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※ [참고] 5대금융지주회사 혁신금융 추진계획 주요내용

(1) 농협금융지주

- **범농협 연계*** 유망 농업 스타트업 발굴·육성과 청년스마트팜 대출확대, 농산업 전문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으로 “농산업 특화 혁신금융” 추진
* 미래농업지원센터(청년농부사관학교), 범농협 통합R&D, 농협유통 플랫폼 등
- 향후 5년간 **동산담보대출 0.2조원, 기술금융 17조원, 성장성 기반 대출 1.8조원** 공급 계획 (총 19조원)

(2) 신한금융지주

- **신한퓨처스랩, 신한BNPP창업벤처펀드, IB부문, 벤처캐피탈** 등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여 4년간 **1.7조원** 규모로 혁신·벤처기업에 대해 투자
* 마중물 및 매칭효과 감안시 최대 6조원의 투자효과 기대
- 향후 5년간 **동산담보대출 2천억원, 기술금융 56.2조원, 일자리창출&혁신성장 협약 보증대출 5.5조원** 공급 계획 (총 62조원)

(3) 우리금융지주

- “스마트산업단지·스마트공장 기업”, “산업부 선정 R&D 우수기업” 등에 대한 특화대출상품 공급, 기술금융 등으로 5년간 혁신창업기업에 **31.1조원** 공급 계획
- 향후 3년간 우리PE를 통해 **3천억원** 규모 **母펀드**를 설립하고, 이를 기반으로 **총 3조원** 규모로 그룹차원의 ‘혁신성장펀드’ 조성

(4) 하나금융지주

- **하나은행·하나금융II의 선발·인큐베이팅(창업단계) → 하나벤처스*의 벤처 투자(성장) → 하나금투의 펀드조성·IPO(성숙) → 하나은행의 대출지원(안정)**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**초생애주기 단계별 지원체계** 공고화
* 금융그룹 최초로 신기술사업금융 전업사로 설립
- 기술금융(9조원), 신성장·4차산업혁명 대출(4조원), 중소·벤처기업 직간접 투자(0.6조원) 등 3년간(‘18~’20년) **총 15조원**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

(5) KB금융지주

- 온라인쇼핑몰 입점 중소기업(seller) 대상 플랫폼 기반 금융(KB셀러론), IP담보대출(KB더드림IP담보대출) 등 새로운 방식의 금융지원 활성화
- 「KB 문화·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투자조합」, 「KB Global Platform Fund」 등을 통해 ‘19년에만 **3,900억원** 벤처펀드 신규결성 추진 계획

※ [참고] 「혁신금융 추진방향」(3.21일 발표) 주요내용

- ◇ 부동산담보·가계금융 위주 → 「미래성장성·자본시장」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
- ◇ 다양한 기업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대출 - 자본시장 - 정책 금융을 아우르는 맞춤형 과제를 선별·집중 추진

주요과제

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·공유하는 「혁신금융」 구축

대출

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:
부동산담보 →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

일괄담보
제도 정착



미래성장성·수익성
기반 평가



포괄적
상환능력 심사

자본
시장

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

①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

- 성장지원펀드 운용방식 개선
- 사모펀드, 대형IB 활성화 등

② 코스닥·코넥스시장 활성화

- 코스닥 맞춤형 상장기준 마련
- 코넥스 신속이전상장 전면 도입

③ 자본시장 세제 개편

- 증권거래세율 인하
-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

④ 금융감독 혁신

- 금융규제 불확실성 해소
- 검사·제재관련 절차 개선 등

정책
금융

선제적 산업혁신 지원

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확대

- 사업재편, R&D 집중 지원
(12.5조원)
- 시장 중심 구조조정 확대
(구조혁신펀드 최대 5조원)

② 서비스산업 혁신 견인

- 서비스업 구조개선
- 新서비스 창출 지원
(5년간 60조원)